

민주,尹정부 출범 1년에 총리·내각·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이재명 “총리·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박광온 “전면적인 인적쇄신 통해 국정 동력 살려야” 대통령실도 쇄신 대상 지목...“검찰 공화국 탈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비판하면서 국무총리와 내각,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 1년을 맞는다”며 “하지만 축하보다 고인과 비판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민생 고통에 아랑곳없이 초보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했고, 주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 그리고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다 그런 초심을 되새겨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정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며 “정치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그건 바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인데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위기이고 국민의 총체적인 삶도 위기다. 그저 국민이 힘들게 견디고 있다”며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출범 1년인 지금이야말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치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만나야 한다. 야당 대표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정치 복원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협력의 이해를 구하고 반드시 야당 대표와 함께 마주 앉는 자리가 필요하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기조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께 진심으로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대통령실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윤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인적 쇄신 대상은 끝없이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굴욕 외교의 중심에 있는 김태호 안보1차장”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김차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언론 대국민 소통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책임자는 바로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며 “대통령의 소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됐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부터 검찰 공화국에서 탈피해야 한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제 10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등 검찰 측근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에게는 낮이 익고 편한 측근들이겠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검찰 네트워크라는 장막에 둘러싸여 정치의 실종이라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여나 인적 쇄신이 총선 출마용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명심해서 누가 국정을 돕는지, 국정을 망치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송갑석,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은 10일국회에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이종호)과 함께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획득 대책을 포함한 함정 근무자 등 장병 복지 개선 방안과 군항 기지경제작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대책

전문가들 참여해 관련 대책 논의

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군 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기획관리참모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군의 인력 정책, 기지 보호작전 책임자와 국방연구원, 경희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도산 안창호급 등 신형 잠수함 도입(KSS-III), 차기 호위함 도입(Batch-3/-4), 신형 고속정(PKMR) 도입 사업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과 주변국의 전력증강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로 해군의 장병 획득률과 장기복무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해군의 전력자산 확충과 인력획득 현실의 엇박자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

부 차원의 인력획득 대책과 초급 간부, 함정 근무자에 대한 특단의 복무여건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인기 집입과 드론 테러 등 기지 경제 위협 요소 증가와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군 전력자산이 모여있는 군항 기지를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 기반 경제작전시스템 적용 등 기지경제작전 개념 및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전력자산의 운용과 유지 중심의 인력획득 대책, 해군 기지에 대한 복합경제작전 수행 능력 등 종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 해군이 복합 유·무인 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필승해군, 정예 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김영순 북구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효율적인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체계 마련



의원(건국·양산·신용동)과 공동 발의하고 효율적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북구에서 전국 두 번째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이후 대수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풍향·문화·두암 1·2·3·석곡동)이 제286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제성

행함에 따라, 타 지자체의 입법사례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정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명문화 ▲위원회 위원장 직위 격상 등 위상 제고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김영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무장애 도시 조성 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며 “실효성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물론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차별이 없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